

# 네이버 모바일 뉴스 정책 변화, 근본 대책 필요



네이버가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빠진 모바일 메인 화면을 곧 공개한다. 네이버는 10월 10일 ‘네이버 커넥트 2018’ 행사를 통해 모바일 화면 개편 버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 시비부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개선 방안으로 만든 6개의 위원회는 카카오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제외하고 가칭 ‘네이버뉴스이용자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은 검색창, 5줄 뉴스, 실시간급상승, 광고 다음에 사진뉴스, 날씨 순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3분기 내에 모바일 홈화면을 검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언급했던 뉴스 편집은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고, 뉴스 아웃링크 전환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하고, 포털이 언론사

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뷰징을 유발해온 실시간 검색서비스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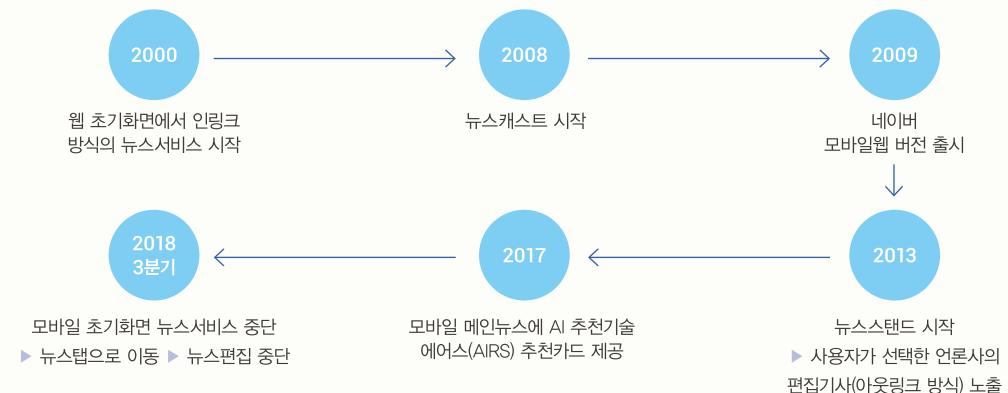
## 모바일 첫화면 뉴스, 급상승검색어 삭제

### 외부 위원회 통합 운영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지난 5월 9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 내에 첫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 상승검색어를 없애고, 검색기능 중심의 홈화면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들이 노출되는 뉴스판에서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신문협회는 5월 15일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버 발표의 진정성을

〈표〉 네이버 뉴스서비스 변천사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상식적 뉴스 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 소비의 편식 등 포털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모든 포털이 적용 받도록 해야 하고, 포털이 뉴스에 대한 책임을 뉴스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8일에는 ‘네이버뉴스 기사배열 공론화포럼’이 공청회를 열고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9가지 뉴스 배열 원칙을 제시했다. 눈에 띠는 것은 언론사와의 합리적인 제휴와 수익배분(인·아웃링크 여부 언론사가 결정), 알고리즘 관리방침 공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외부 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전가’ 비판을 받아온 외부 기구의 통합 등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편집을 담당하는 유봉석 전무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가칭)네이버뉴스이용자위원회로 통합해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배열 공론화포럼을 비롯해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 스포츠이용자위원회, 댓글정책이용자패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어뷰징 유발 실검서비스 폐지하고 근본적 알고리즘 개선해야

2000년 5월 네이버는 웹 초기화면에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사의 반발이 심해지자 2008년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스 캐스트는 제휴언론사의 기사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랜덤 노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어뷰징 기사로 논란이 일자 2013년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스스탠드는 웹 초기화면에서 기사가 아닌 언론사 로고를 노출하는 것으로, 사용자 본인이 언론사를 설정해 뉴스를 보는 방식이다. 2009년 6월 모바일웹 버전을 출시한 네이버는 뉴스편집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모바일 메인뉴스에 인공지능(AI) 추천기술인 에어스(AIRS) 추천카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단의 메인뉴스는 네이버에디터가 직접 편집하고 있고, 메인뉴스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압도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집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